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 및 경제대책

헤드라인뉴스 입도객(入島客) 대상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제출 의무화

산업·경제 4차에 걸쳐 약 8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사회·복지

사업체의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을 지원하는 웹사이트 운영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
봉쇄조치(lockdown) 연장 및 시민 협조 호소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버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입도객(入島客) 대상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제출 의무화

인도네시아 발리주 / 사회·복지

인도네시아 발리주와 중앙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말 연휴를 축소하고 실내외 모임 등의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연휴 기간 동안 발리를 방문하는 입도객(入島客)을 대상으로 도착 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재조치를 시행

배경

- 인도네시아 발리주의 12월 1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15,700명, 누적 사망자 수는 약 470명,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명 내외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19 감염 지속적으로 확산
 - 인도네시아 내 다른 주보다 상대적으로 확진자·사망자 수가 적으나, 발리주 내 2개 지역이 위험구역(red zone)으로 지정된 상태
- 발리주의 관광산업은 내국인에 의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객실 점유율은 11월 기준 최대 20%에 불과(코로나19 이전의 최소 40% 수준과 큰 차이를 보임)
 - 지역경제의 55%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악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0.98% 추산
 -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무비자·관광비자 발급 중단으로 4월 이후로 신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거의 전무
 - 10월 한 달 동안 발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불과 5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99% 감소

주요 내용

- 중앙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성탄절과 신년 연휴 사이에 계획했던 특별 연말 대체공휴일(12월 28일~30일)을 전격 취소
 - 1일 15,000명 방문을 기대한 발리 주정부와 관광업계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많은 호텔 예약자들이 예약금 선납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정부 발표 즉시 예약 취소 문의가 평소 대비 10배로 증가하였으며, 일부 업체는 예약 취소율이 최대 80%에 달하기도 함

- 중앙정부와 발리 州정부는 성탄절과 신년 연휴를 포함하여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실내외 모임, 불꽃축제, 음주를 전면 금지하고,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의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지침을 의무화
 - 지침 위반 시 개인은 건당 10만 루피아(약 7,800원), 업체는 100만 루피아(약 78,000원)의 벌금 부과
 - 항공편으로 온 방문객은 코로나19 PCR검사 음성결과서, 배편을 통해 온 방문객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필수(도착 7일 전 발급부터 유효)
 - 당초 도착 2일 전 발급부터 유효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검사에 인파가 몰릴 것을 염려한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도착 7일 전 발급부터 유효한 것으로 변경
 - 또한, 12세 이하 아동, 승무원, 환승객, PCR검사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오는 승객 대상으로는 음성결과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도착 즉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 항공편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이고, 배편 이용자는 단순 관광객 외에 무역상 등 생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차등 규정 적용
 - 일반적으로 PCR검사 비용은 신속항원검사 비용 대비 약 4~8배
 - 또한, 방문객은 발리 체류기간 내내 음성결과서를 소지·제출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즉시 인근 병원에서 음성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중앙정부(창조경제관광부)는 경영악화에 처한 관광 부문 사업자에게 관광보조금을 지급하고, 보건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사업자 인증제를 준비
 - 관광사업허가등록증, 8월 이후 현재까지 업체를 운영 중임을 확인하는 자필서류, 2019년 호텔·레스토랑 세금납부내역서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11월 중순에 이루어진 1차 접수 시 753개 호텔 및 235개 레스토랑 사업자가 신청
 - 유엔관광기구(UNWTO)의 청결·건강·안전·환경지속가능성(CHSE) 보건지침 준수를 서약한 6,600여 개 업체에 I DO CARE(InDOnesia CARE) 인증 계획
 - 처음에는 900여 개 업체로 시작을 계획하였으나, 벌써 4,000개 이상 업체가 참여 결정
 - 등록된 업체의 보건지침 준수 여부를 6개월마다 모니터링·평가하여 재인증
- 또한, 중앙정부(국영기업부 및 해양투자조정부)는 발리州에 국제수준의 의료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
 - 동남아시아 지역에 다수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 Mitsui사(社)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는 차별화된 브랜드로 진행될 계획
 - 중앙정부의 5개년 중점 전략사업 중 하나인 5대 최우선 중점관광지 개발·촉진의 연장선

정책 평가

- 당장 닥친 연말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한 제재 강화와 함께 관광 산업 중심의 지역경제를 장기적으로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보임
 - 내국인 관광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경우 내년 1/4분기에 재개될 외국인 관광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다만 모임 금지 등 지침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액수가 낮고, 고비용의 PCR검사가 관광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보건·관광 양쪽 모두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가 나올지는 다소 의문이 제기
- 발리주의 입도객(入島客) 음성결과서 지침 의무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도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음
 - 현재 자카르타주 외 몇몇 지자체가 타 지역 주민 방문 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지침 또는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 운전자의 무작위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검토 중
- 관광보조금 지급의 경우 호텔·레스토랑 사업자 외에 투어 가이드, 호텔형 아파트, 행사 주최업체 등 다른 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도 존재
 - 중앙정부는 대상 확대를 현재 검토 중이나, 납세(지방세) 내역과 사업허가등록증이 확실한 호텔·레스토랑 사업자와는 다른 책무성(accountability) 문제를 우려
 - 따라서 관광투어 가이드 등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광보조금 외에 별도의 경제 회복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

<https://bali.tribunnews.com/2020/11/18/tingkat-hunian-hotel-di-bali-baru-20-persen-andalkan-wisatawan-domestik-meski-kunjungan-belum-pulih?page=all>

<https://bali.tribunnews.com/2020/11/28/wisata-medis-dimulai-di-bali-erick-thohir-sebut-akan-kerjasama-dengan-perusahaan-jepang?page=all>

<https://bali.tribunnews.com/2020/12/02/kunjungan-wisman-ke-bali-oktober-2020-tercatat-58-orang-turun-3012-dibanding-bulan-sebelumnya>

<https://bali.tribunnews.com/2020/12/12/didukung-pbb-kapan-pariwisata-bali-untuk-wisman-dibuka-menpa-rekraf-sebut-tidak-sederhana?page=all>

<https://bali.tribunnews.com/2020/12/15/perhatian-dilarang-pesta-saat-malam-tahun-baru-masuk-bali-via-pesawat-wajib-tes-swab?page=all>

<https://bali.tribunnews.com/2020/12/12/jelang-libur-nataru-menparekraf-minta-pemprov-bali-ketatkan-prtokol-kesehatan-berbasis-chse?page=all>

<https://bali.tribunnews.com/2020/12/12/apakah-dana-hibah-pariwisata-berlanjut-di-tahun-2021-mendatang-gbegini-kata-jubir-kemenparekraf?page=all>

<https://www.wisata.beritabali.com/read/2020/12/17/202012170006/masuk-bali-wajib-tes-pcr-btb-industri-mestinya-dilibatkan-lebih-awal>

<https://www.news.beritabali.com/read/2020/12/17/202012170018/bali-tanggapi-usulan-tes-rapid-antigen-bagi-penumpang-pesawat-dan-swab-gratis>

<https://www.news.beritabali.com/read/2020/12/17/202012170011/gubernur-ubah-surat-edaran-syarat-masuk-bali-ini-alasannya>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4차에 걸쳐 약 8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말레이시아 / 산업·경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이동제한령(MCO)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중앙정부는 4차에 걸쳐 2,950억 링깃(약 8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취약계층 지원책을 발표

배경

- 이동제한령 시행으로 인한 경제 악화
 - 말레이시아는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완화하고자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필수서비스(수도·전기·은행·국방·치안·청소·공항·항만·식품 소매 등)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장의 영업을 중단하는 이동제한령을 시행
 - 5월 1일 무하딘 야신 총리의 특별담화에 따르면, 이동제한에 따른 누적 손실 규모는 630억 링깃(약 17조 673억 원)
 - 5월 실업률은 5.3%로 2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로 240만 명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
 -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으며, 이동제한령이 장기화되면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경기부양책과 취약계층 등 지원의 주요 내용

- 1차 경기부양책(2월 27일)
 - 당시 모하맛 마하티르 총리는 2월 27일 200억 링깃(약 5조 4,218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 당시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지 않았기에 소규모 예산이 책정됐으며,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에 집중
 - 1차 경기부양책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피해 완화, 국민중심 경제성장, 질적 투자 증진임. 이 중 취약계층 지원책은 국민중심 경제성장에서 찾아볼 수 있음
 - 국민중심 경제성장은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포함
 - 근로자연금기금 부담률을 11%에서 7%까지 축소, 저소득층 지원, 식품업계 중소 벤처기업 지원, 소규모 사업 추진(도로·하수도 정비 등 인프라 구축, 주거지 및 학교 정비 및 보수), 원활한 물품 조달 지원 등

- 2차 경기부양책(3월 27일)
 - 3월 27일 총리로 취임한 무하딘 야신 총리는 2,500억 링깃(약 67조 7,125만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이는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17%에 달하는 금액
 - 2차 경기부양책의 주요 골자는 국민복지(1,280억 링깃), 중소기업 등 기업 지원(1,000억 링깃), 국가경제 강화(20억 링깃) 등임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복지 지원책은 다음과 같음
 - 가계소득 하위 40%(B40)와 가계소득 중위 40%(M40)에 현금 지급. 이를 위해 월 가구소득 4,000링깃 미만 가구에 1,600링깃(약 44만 원) 지급, 월 가구소득 4,000링깃 이상 8,000링깃 미만 가구에 1,000링깃(약 27만 원) 지급, 월 가구소득 2,000링깃 미만 21세 이상 미혼 국민에게 800링깃(약 22만 원) 지급, 월 가구소득 2,000링깃 이상 4,000링깃 미만 21세 이상 미혼 국민에게 500링깃(약 13만 원) 지급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200링깃(약 5만 원) 지원
 - 4월부터 이동제한령(MCO) 종료 때까지 인터넷 무료 제공
 - 4월부터 6개월간 최대 전력 600킬로와트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15%에서 50%까지 감면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5억 3천 링깃 지원
 - 공공주택 임대료 6개월간 면제
 - 보험 및 타카풀(이슬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비를 300링깃(약 8만 원)까지 보장
 - 4월 1일부터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 12만 명을 대상으로 500링깃(약 13만 원) 지급
 -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5억 링깃(약 1조 2,000억 원) 할당
 - 정부기관 대상 식품 공급 및 청소용역 업체 등 서비스업체 급여 지급
 - 매출이 50% 이상 하락한 고용주에 한해 급여 4,000링깃(약 108만 원) 지급
 -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장애인, 노숙자 등) 대상으로 2,500만 링깃(약 67억 원) 규모의 식량, 임시 거주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3차 경기부양책(4월 6일)
 - 4월 6일 무하딘 총리는 중소기업 직원에게 보조금 지급, 임대료 인하 등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로 100억 링깃(약 2조 7,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발표
 - 중소기업 추가 지원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임금 월 4,000링깃(약 108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 직원 대상 보조금 지급
- 소상공인에게 특별 보조금 3,000링깃(약 81만 원) 지급
- 일부 은행의 대출이자 면제
- 정부 혹은 공공기관 소유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면제 혹은 인하
- 중소기업에 임대료를 면제 혹은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동일한 금액의 감세 혜택 제공
- 4차 경기부양책(6월 9일)
 -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봉쇄조치를 상당 부분 완화한 회복 이동제한령 (RMCO)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을 격려하기 위해 4차 경기부양책을 발표
 - 350억 링깃(약 9조 4,881억 원) 규모의 4차 경기부양책의 주요 골자는 세금 혜택, 기업 지원, 내국인 고용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지원임
 - 4차 경기부양책은 취약계층 지원책으로 1억 8백만 링깃(약 292억 원)을 할당. 19만 명의 등록된 장애인, 15만 명의 빈곤선 이하의 미혼모, 2,000명의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300링깃(약 8만 원) 지급

정책 평가

-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과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 제기
 - 말레이시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큰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보임
 - 하지만 경기부양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부담이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율이 53%에서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
 - 재무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올해 재정적자가 5.8~6% 예상된다고 발표
 - 전문가들은 추가 세수 확보, 통화량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이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증세와 통화량 확대 정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 한편 말레이시아 프탈링자야의 연구소인 메르데카센터는 코로나19로 빈곤층이 5~8%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해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의구심을 나타냄
 -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시행한 봉쇄조치가 결과적으로 말레이시아 산업경제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지적

<https://www.aseanbriefing.com/news/malaysias-penjana-stimulus-package-key-features/>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cnainsider/who-are-malaysia-s-new-poor-the-covid-19-recession-13451452>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insight-malaysias-economic-stimulus-package-2020-tax-measures>

총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사업체의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을 지원하는 웹사이트 운영

일본 교토市 / 사회·복지

교토市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과 안전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지원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

배경 및 목적

- 교토市는 코로나19 감염 예방·확산 방지 대책과 경제활동의 조화, 시민생활·지역 커뮤니티와 관광의 조화를 피하는 방안을 모색
 - 市는 코로나19 사회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풍요로운 삶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관광 스타일 추진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사회에서 시민과 관광객의 안심·안전 확보를 위한 자문팀’(ウィズコロナ社会における市民と観光客の安心・安全の確保に向けたアドバイザーチーム)을 설치
 - 또한 市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코로나19 대책과 경제활동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웹사이트 ‘자문팀에 의한 사업자의 감염증 대책 등 서포트 내비게이션’(アドバイザーチームによる事業者の感染症対策等サポートナビ)을 개설
 - 이 지원 웹사이트는 사업자가 어떤 감염증 대책을 추진하면 좋을지 잘 모를 때 활용할 수 있음

주요 내용

- 지원 웹사이트는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점포,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함
 - 지원되는 내용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자문팀을 활용한 상담, 감염증 대책 상황 체크리스트나 지원제도를 비롯해 감염증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임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에어컨 사용법이나 창문이 작은 시설의 환기대책을 소개하는 영상, 사업자가 실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감염증 대책 영상, 업종별 감염증 대책 영상을 제공
- 감염증 대책 상황 체크리스트 제공
 - 사업자가 실시하고 있는 감염증 대책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확인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대책이 있으면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크리스트를 고객의 눈에 띠는 장소에 붙임으로써 점포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고객에게 직접 부탁하기 어려운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 새로운 지원제도인 ‘환기·가습 등 대책 보조금’ 소개
 - 市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적정한 환기와 습도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교토市 관광협회와 함께 市 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기·가습 대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
 - 대화나 기침, 재채기 등으로 발생하는 에어로졸(aerosol)은 장시간 공기 중에 떠 다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환기와 가습이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환기는 1시간에 2회,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습도는 40%를 목표
 -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지원 웹사이트의 ‘실효성 있는 환기 방법’을 비롯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함
 - 지원 대상 경비는 환기, 가습, 난방설비, 이산화탄소 농도 및 습도 계측 등에 필요한 경비임
 - 보조금은 1개 점포당 5만 엔(약 53만 원)까지 지원하고, 한 사업자당 10개 점포까지 지원 가능

정책 평가

- 지원 웹사이트는 사업자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원활하게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한편 市는 중소기업체가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지원책을 선택하고, 신청절차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소기업 등 지원책 활용 서포트 센터’(中小企業等支援策活用サポートセンター)도 운영

<https://www.newstyle-kyoto.com/>

<https://www.city.kyoto.lg.jp/gyoza/page/0000277663.html>

<https://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75390.html>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등 / 사회·복지

캐나다에서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격오지(隔奧地) 및 거동제한 환자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등 주정부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음. 진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컴퓨터 화상통화 프로그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전화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비대면 진료 수요가 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배경

-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 이용 증가
 - 캐나다 비대면 진료는 주별로 상이하지만 1990년 중반에 도입되어 시행 중
 - 코로나19 유행 이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0.1~0.2% 정도 차지
 - 특히 앨버타주의 원격진료는 1996년부터 시행되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 대면 진료 대비 50%의 진료수가가 책정되어 요율 인상 요구 증대
 - 비대면 진료비는 대면 진료 이용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서 의사에게 직접 지급
 - 일부 주정부는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대면 진료와 같은 진료비 청구를 허가
 - 코로나19 유행 이후 원격진료를 이용해본 캐나다 국내 환자 비율이 이전 대비 63% 증가

비대면 진료 방식과 지원 확대

- 비대면 진료 방식
 - 주치의가 있는 환자는 해당 의원에게 전화해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안내받을 수 있음
 - 비대면 진료는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
 - 전화
 - 일반적인 화상통화는 페이스타임, 왓츠앱(WhatsApp), 줌(Zoom) 등을 이용
 - 비대면 진료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은 바빌론 텔러스 헬스(Babylon by Telus Health¹⁾)로, 환자는 진료 신청 전에 해당 앱을 미리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아야 함

1) 캐나다의 대표적인 민간통신회사의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바빌론이라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제휴하여 화상진료 및 상급병원 진료 의뢰, 환자 증상 기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 현재 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서비스되고 있음

- 모든 의료비는 현행 병원 이용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서 의사에게 직접 지급
-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원
 -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20년 4월부터 비대면 의료수가 인상을 결정해 이용을 권장
 - 환자 1인의 일일 1회 원격진료당 34.44달러(약 3만 원)를 건강보험을 통해 의사에게 원격진료비 지급
 - 20분 이상 개인 상담료 58.46달러(약 5만 원) 등 상담료를 별도 책정
 -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진단결과 발송비용 또는 전화요금 등도 별도 청구
 - 앨버타주는 2020년 3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독립된 비대면 진료 코드를 부여하고 대면 진료와 동일한 진료수가 반영
 - 기존에는 전화, 비디오, 이메일 진료에 대해 대면 진료비보다 51~91% 저렴하게 지불하고, 환자 1인당 20달러(약 1만 7천 원) 한도로 제한해 왔음
 -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한 한시적인 조치를 영구적 조치로 변경
- 비대면 진료에 대한 주민 인식
 - 캐나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가 환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한 의사와 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 환자의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응급실 방문(74%)보다 원격진료(91%)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초진 환자의 약 38%는 원격진료를 병원 방문 진료보다 선호
 - 캐나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

정책 평가 및 시사점

- 캐나다의 지리적 특성 및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각 주정부가 빠르게 대응
 - 인구밀도가 km^2 당 4.0명(인구밀도 세계 평균은 56.5명/ km^2)이기 때문에 원거리 환자 접근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전화 진료를 중심으로 이미 존재
 - 특히 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정신과 진료의 비대면 진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
 - 전염병의 대유행에 따라 의사의 1일 진료건수 감소 및 비대면 진료수가 조정 등에 대해 각 주정부가 비교적 빠르게 대응
 -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점 존재
 - 영국에서 시작된 바빌론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2020년 초 영국에서 환자 진료정보 보안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캐나다에 도입되어 서비스 중
 - 캐나다 의사협회는 현재 일반 무료 채팅앱 솔루션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술과 보안상의 이유로 지연될 것을 우려
- 비대면 의료 도입에 대한 시사점
 - 코로나19 유형을 계기로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비대면 진료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임
 - 그러나 전 국민 무상의료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격오지(隔奥地) 진료 서비스라는 특성을 가진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른 만큼 국내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특히 상급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주치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의무인 캐나다에서는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검토가 선결과제임
 - 또한 의료서비스의 보안 문제는 세계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https://globalnews.ca/news/7041384/virtual-physician-visits-alberta/>

<https://globalnews.ca/news/6719395/coronavirus-alberta-doctors-billing-codes-virtual-care/>

<https://edmontonjournal.com/news/politics/covid-19-edmonton-doctors-group-says-virtual-visits-could-close-clinics-because-of-low-fees>

<https://www.cbc.ca/news/canada/calgary/babylon-health-app-1.5605570>

봉쇄조치(lockdown) 연장 및 시민 협조 호소

독일 헤센주 등 / 사회·복지

10월 말부터 독일 전역을 강타한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헤센주 등 독일 각 주는 11월 한 달 동안 시행했던 ‘낮은 수준의 봉쇄조치(lockdown)’을 한 달 더 연장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함. 기존의 법과 행정체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객관적 근거를 통해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코로나19 추이

- 헤센주를 비롯하여 독일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 급증
 - 독일 헤센주(인구 약 630만 명)의 누적 확진자 수는 10월 1일 19,492명, 11월 1일 43,379명, 11월 25일에는 79,260명 기록
 - 독일 전역(인구 약 8천만 명)의 누적 확진자 수는 11월 25일 현재 96만 명
 - 11월 24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약 1만 3천 명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

- 16개 주의 지사와 연방 총리가 함께 한 회의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 ‘낮은 수준의 봉쇄조치(lockdown)’ 조치가 거의 효과가 없자, 11월 25일 다시 주지사 회의를 열어 12월 20일까지 연장하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관련 특별규정을 둠
- 헤센주의 11월 한 달간 방역규정
 - 사람 사이 1.5m 거리두기, 접촉 최소화, 문화/레저/스포츠 시설 폐쇄
 - 음식 배달과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식당, 바, 카페 등 요식업 사업장 영업 금지
 - 여행 목적의 호텔 숙박은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 행사는 특별한 공적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에만 허용. 종교행사와 내년 봄에 있을 지방선거 관련 모임은 허용
 - 보행자 도로처럼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야외일지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헤센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市에서는 도심 마스크 의무 착용 지역 선정
 - 5학년부터는 교실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이전에는 수업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었음)

- 모든 사업장에는 10제곱미터당 1명 입장 가능
- 공공장소에서는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음주 금지
- 12월에 추가된 방역지침
 - 80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1인당 20제곱미터의 공간이 보장되어야 함
 - 혜센це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등교는 계속 시행하지만, 주민 10만 명 기준으로 7일간 신규 확진자가 200명 이상 발생되는 ‘코로나 핫스팟’ 지역에서는 학교 폐쇄 가능. 이는 강제 기준이 아닌 권고 기준임
 - 크리스마스에는 가구당 최대 5명, 2가구까지는 함께 모일 수 있음(단, 14세 이하는 인원 제한 숫자에 계산하지 않음)
 - 송년 폭죽놀이는 개인적인 공간에서만 허용하고, 공공장소에서는 금지
 - 주민 10만 명당 7일간 신규 확진자가 35명 이하인 지역은 자체적으로 록다운 (lockdown) 해제 결정을 할 수 있음
 - ‘크리스마스 방학’을 앞당기고, 사업장은 가능한 한 휴업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것을 권유
- 기타 사항
 - 독일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마스크 착용에 관한 의무 규정이 점진적으로 강화
 - 혜센це의 11월 25일 현재 병상 점유율은 85%. 2~3주 안에 감염 확산 속도가 줄어들지 않으면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의료인력 부족이 우려
 - 코로나 위기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민을 상담하거나, 종교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종교의식은 허용(단, 방역수칙은 지켜야 함)

정책 평가

- 독일 방역대책의 성과 그 자체보다 대책 합의 과정이 유의미. 기존의 법과 행정체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객관적 근거를 통해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주지사 회의를 너무 늦게 연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메르켈 총리는 ‘팬데믹을 막겠다고 독일 연방제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 밝힌 한편, 시민을 향해서는 ‘이런 결정이 무리한 요구인 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해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
 - 정책 통보 방식도 의무나 강제를 강조하기보다 호소와 권고 형태를 띰

- 학생들의 학교 등교를 두고 찬반 논쟁이 제기
 - 학교 등교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교사나 학생들이 모두 온라인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으므로 등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모들의 경제활동을 위해 학생들을 무리하게 등교시킨다고 주장하며 건강보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정책이라고 비판
- 주지사 회의 결정내용의 합리성에 관한 논란도 발생
 - 튜링엔주 지사는 주지사 회의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중 실제로 팬데믹 제어에 효과가 있는 것만 지키겠다고 선언
- 방역대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음
 - 종교행사와 정치행사는 허용하고, 백화점은 열게 하면서 문화시설은 폐쇄한 점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음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buerokratieabbau/videokonferenz-der-bundeskanzlerin-mit-den-regierungschefinnen-und-regierungschefs-der-laender-am-28-oktober-2020-1805248>

<https://interaktiv.morgenpost.de/corona-deutschland-intensiv-betten-monitor-krankenhaus-auslastung/>

<https://www.fr.de/panorama/corona-regeln-weihnachten-silvester-covid-19-deutschland-lockdown-light-dezember-heute-live-ferien-merkel-zr-90108851.html>

Corona-Gipfel: Teil-Lockdown bis Anfang Januar geplant | Deutschland (fnp.de)

Ministerpräsidentenkonferenz: "Wir wissen, was das für Zumutungen sind" | ZEIT ONLINE

이 은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93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12월 21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